

##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와 2019년 한일 갈등

이정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속에서는,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한 정책기조를 역사수정주의 세력과 평화주의 세력의 양분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2019년 7월과 8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의 엄격화'로 부르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근간에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적 정책 기조에 입각한 역사 정책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한국사회에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은 정치인 아베의 역사 인식과 일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베 정권은 2015년 아베 담화를 기점으로 국제주의에 입각한 역사 정책을 추구하여왔고, 이를 통해 '국제질서' 개념을 일본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으려 추구하였다.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 외교는 아베의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을 우려하며 실용주의적 외교를 지향하는 일본 국내의 보수리버럴과 중도세력에게 안도감을 주며 이들의 아베 정권 외교에 대한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2019년 한일 갈등에 대한 일본 내 담론 구조에서 험한론과 역사수정주의가 아닌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한국'의 반한 담론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일본 보수중도가 지지하고 아베 정권이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국제주의 외교는 '국제질서'의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이익에 따른 전략적 계산에 입각한 외교 정책들에 대해서 정당화 수단이 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현재 국제주의의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지지하는 일본 내 보수중도 세력에게는 실용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강하고, 따라서 외교적 협상으로 양국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일본 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목 차

1. 문제제기
2. 아베 정권기 역사수정주의 정책화의 한계
3. 2015년, 일본 정부의 국제주의 역사 정책 정착
4. 가치관 외교 패러다임과 물신화된 ‘국제질서’
5. 나가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다양한 반발의  
목소리가 있지만,  
한국의 ‘신뢰관계의  
훼손’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존재**

## 1. 문제제기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1일 ‘대한민국을 향한 수출관리 운영 재검토(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를 발표하고 3일 후인 7월 4일부터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3개 품목의 대한 수출을 포괄수출허가제도에서 빼서 개별 수출허가신청을 통한 수출심사 대상으로 변경시킴. 또한 동 발표문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검토를 예고하고, 그 결과로 일본 정부는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각의 통과시킴<sup>1)</sup>
- 일본 정부에 의한 소위 ‘수출관리의 엄격화’는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부인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 사이 역사 인식 관련 현안인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임은 자명한 사안. 일본 정부에 의한 상정 외의 도발로 인해 2019년 7월과 8월 초의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시기 중 하나로 손꼽혀지게 되었음
- 일본 정부는 보복도 아니며 금수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본 국내 제도 변화임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한국에 대한 무역관리 변동의 이유로 ‘신뢰 관계의 훼손’을 언급하고 있지만, 신뢰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또한 수출관리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한국에 사전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설명책임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일반 행정사무와 국가관계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음. 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명확한 가운데 국제무역 규범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포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자기기만적 성격이 다분함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다양한 반발의 목소리가 있지만, 한국의 ‘신뢰관계의 훼손’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존재함. 따라서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엄격화’에 대한 일본사회의 지지도는 높은 상황.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일본 기업들에게 주는 피해에 대한 우려,<sup>2)</sup> 외교적 출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sup>3)</sup> 등은 한국 측이 ‘신뢰 관계의 훼손’을 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책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징용재판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명확한 가운데, 소위 ‘신뢰관계의 훼손’이 역사 문제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일본 내 불만이라는 점은 분명한 상황
-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의 기준과 삼권분립에

대한 존중의 패러다임이 일본의 오피니언 그룹 내에서 조약과 협정의 국가 간 약속에 대한 신의 배반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일본사회 내 지지가 큰 상황임. 역사적으로 언제나 존재해온 문명론적 한국 비하의 혐한론과 일본의 과거 역사적 과오에 대한 부정론에 입각해 있는 역사 수정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반한 담론이 2019년 한일 갈등의 기저에 존재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응 속에서는, 일본의 대한 정책에 대한 정책 기초를 역사수정주의(역사왜곡)와 평화주의 세력의 양분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 정책에서 역사수정주의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역사 현안 관련 대한정책의 중심 기초라 보기 어려움. 정치인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에서 기인하는 아베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일본 국내의 우려는 아베 정권이 2015년 아베 담화를 기점으로 국제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약화되었고, 아베 정권은 국제주의 노선을 통해서 일본 국내의 보수리버럴과 중도세력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음
-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 전면화된 2019년 한일 갈등을 아베를 비롯한 정권 핵심관계자의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강경보수 세력을 넘어서 일본 내에 보다 광범위한 실용주의적 보수중도 세력에게 퍼져 있는 한국이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고 하는 논리의 근간이 되는 국제주의 외교 노선 속에서 이해하여야 함

## 2. 아베 정권기 역사수정주의 정책화의 한계<sup>4)</sup>

- 아베가 일본 정치권 내에서 역사수정주의를 대표해 온 인물인 것은 명확한 사실. 1990년대 보수리버럴과 혁신세력에 의해 주도되어온 역사 화해 노선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던 여러 의원 단체(역사·검토위원회,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 역사교육의원연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아베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침략' 정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이슈에서 역사 화해 노선과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해왔던 인물임.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지에 대한 아베의 인식은 의회 속기록과 미디어 보도에서 쉽게 발견됨<sup>5)</sup>
-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은 일본 국내와 역사 현안 이슈와 관련된 주변국가인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려하던 사항임.<sup>6)</sup>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은  
일본 국내와  
역사 현안 이슈와  
관련된 주변국가인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려하던  
사항*

**2013년 아베의****야스쿠니 참배****강행에 대한****미국의****부정적 태도는****제2기 아베 정권의****역사 정책에서****미국 변수에 대한****고민이 커질 수밖에****없는 조건**

제2기 아베 정권 출범 전에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서 제1기 아베 정권기에 역사수정주의적 인식의 정책화 실패를 자아비판하는 아베의 발언들 속에서 이와 같은 우려는 확대되었음

- 하지만, 제1기 정권기(2006~7) 동안 역사수정주의의 정책화, 즉 역사 화해 노선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역사 정책의 변동은 이루어내지 못했던 아베는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기 정권기에도 역사수정주의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한계를 보였음
- 제2기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의 정책화를 당초부터 포기하였던 것은 아님. 2013년에 역사수정주의 정책화의 여러 증후가 있었음.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학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발언을 함. 또한, 고노 담화가 나오기까지의 경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고노 담화 집행 과정이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외교적 타협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킴.<sup>7)</sup> 결정적으로 2013년 12월 26일 기습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함
- 하지만 2013년 이후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노 담화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노 담화 자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는 중. 제2기 아베 정권의 초기 시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야스쿠니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부 정책에 역사수정주의적 성격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지만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 노선으로 역사 정책의 대폭적 변경은 이루지 못함
- 2013년 12월 26일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역설적이게도 아베 정권 역사 정책에서 역사수정주의가 제약되는 계기가 됨.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일본 국내의 논란과 한국·중국의 비판은 예상되었던 것에 비해서 미국 정부의 우려는 예상외로 간주됨.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기존까지 한일 관계, 중일 관계의 외교 이슈로 전개되어 왔으나, 2013년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태도는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에서 미국 변수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됨
-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 강행 이후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은 전후 70주년인 2015년에 아베 정권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는가에 집중됨. 아베는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에 반대하는 역사 인

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후 60주년이었던 2005년에 무라야마 담화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담아낸 고이즈미 담화와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담화를 만들어 내고 싶어 함. 무라야마 담화와는 다른 ‘미래 지향적’ 내용을 담아내고 싶다고 발언해 온 아베가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전후 70주년 담화를 표명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 국내외의 관심이 증폭됨. 전후 70주년 담화는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간주되었음

### 3. 2015년, 일본 정부의 국제주의 역사 정책 정착

- 아베 정권은 종전 70주년인 2015년 8월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와 차별화되는 아베 담화를 내놓기 위한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구성함. ‘20세기를 되돌아보고 21세기의 세계 질서와 일본의 역할을 구상하는 지식인 간담회(20世紀を振り返り21世紀の世界秩序と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 이하 21세기구상간담회)’는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6회 개최되었고, 8월 7일 최종보고서를 내놓음<sup>8)</sup>
-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위원들 사이에 동의된 내용들이 전후 70주년 담화에 담기고, 이것이 제2기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중심적 요체가 된다는 점에서 21세기구상간담회의 의의가 있음. 하지만, 21세기구상간담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이미 논의 결과의 내용은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음. 16명의 위원 중 역사수정주의자는 교토대학 명예교수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 한 명뿐임. 후에 나카니시는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이 고립되어 있었다고 회고함<sup>9)</sup>
-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이 간담회 내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본 근·현대사에 대해 나카니시와 의견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보강되었어야 하고, 아베는 그러한 인사들과의 인연이 깊음. 하지만,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는 아베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역사수정주의적 역사 인식 보유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움
- 간담회 내용 구성과 발표문의 중심을 이루는 특징은 일본적 맥락이 아니라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일본의 행위와 위상을 논하고 있다는 점임. 21세기구상간담회 논의를 주도한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3차 모임에서 초빙발표자로 나선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4차 모임의 초빙발표자 호소야 유키(細谷雄一)는 일본 근현대사를 국제질서에 대한 일본의 협조와 이탈을 기준으로 일본사를 평가하고자 함

*21세기구상간담회의  
토론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타오카 등의  
국제주의 관점은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과  
공존하기 어려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현 상황에  
대한 정당화이며,  
그렇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1세기구상간담회  
논의의 핵심**

- 21세기구상간담회의 토론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타오카 등의 국제주의의 관점은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과 공존하기 어려움. 우선 역사수정주의는 역사 인식에서 일본 중심주의이고, 일본이라는 문화 공동체의 역사적 연속성 속에서 일본 역사를 해석하는 복고주의임. 국제주의의 관점은 역사수정주의가 비판해온 진보 사관과는 거리가 있지만, 일본사를 일본 밖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역사수정주의 세계관과 충돌함
- 나아가 국제주의 관점에서 발견되는 전전과 전후 시기 국제질서의 성격에 대한 평가도 역사수정주의 세계관과 충돌함. 국제주의 관점에서는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 발전에 대한 미국의 공헌을 높게 보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함. 하지만 역사수정주의 세계관에서 미국은 전후 일본이 자신의 문명론적 가치관을 반영한 국가 체제와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임. 전후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의 개정 문제에 대해 국제주의의 관점과 역사수정주의 모두 개헌론으로 연결되지만,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개헌은 자주성과 전통성, 즉 미국에 의해 훼손된 일본적 가치와 국가적 명예의 복구라는 의미를 갖는 반면에,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있는 기타오카에게 개헌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면서 일본의 번영이 기대고 있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
- 21세기구상간담회는 국제주의 관점에서 일본의 근·현대사를 보고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최종 보고서에 고스란히 반영됨. 더 정확하게는 국제주의 관점을 담아내기 위한 간담회 위원 구성이었다고 볼 수 있음.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주류적인 국제주의 관점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해 성찰적 시각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 소지가 다분함. 이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현 상황에 대한 정당화이며, 그렇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1세기구상간담회 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역사 화해 노선이 반성의 대상을 아시아로 삼고 있다는 점과 큰 차이를 보임. ‘세계 속의 일본’을 고려해야 한다는 21세기구상간담회의 국제주의 관점에서 ‘세계’는 ‘미국’으로 대체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음
- 21세기구상간담회의 결과 보고서에 기반을 둔 총리 담화는 2015년 8월 14일에 발표됨. 아베 담화의 핵심 키워드는 국제질서임. 해당 시대의 국제질서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일본의 근·현대사에서 각 시기 별 해석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국제주의적 역사 인식은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기타오카나 호소야가 보여준 인식이기도 함

- 이러한 국제주의적 역사 인식은 아베 담화 발표 이전에 2015년 4월 22일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등 회의) 60주년 기념 정상 회담에서의 아베 총리 연설<sup>10)</sup>과 동월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의 아베 총리 연설<sup>11)</sup>에서도 국제질서에 대한 강조는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음. 이는 21세기구상간담회의 논의 과정 또는 이전에 제2기 아베 정권 내에서 국제주의적 관점이 정부 역사 정책의 공식적인 외형으로 선택되었으며, 이에 입각하여 21세기구상간담회의 구성원이 선택되었다는 점을 암시해 줌

#### 4. 가치관 외교 패러다임과 물신화된 ‘국제질서’

- 아베 담화의 마지막 부분은 아베 정권 외교 정책 지향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자가 되어 버린 과거를 우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일본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며,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손잡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가치를 높이 내걸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지금껏 이상으로 공헌해 나가겠습니다. 종전 80년, 90년, 나아가서는 100년을 향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일본을 만들어 나갈 그런 결의입니다.’<sup>12)</sup>
- 이 부분은 가치관 외교 정책 노선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가치관 외교 정책 노선은 제1기 아베 정권의 ‘자유와 번영의 호,’ 제2기 아베 정권의 ‘민주적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의 바탕이 되어 왔음.<sup>13)</sup>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외교를 우선시한다는 점은 이러한 가치를 국가 정치 체제의 원칙에 포함하고 있지 못한 중국, 북한에 대한 배제의 논리가 됨. 가치관 외교는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에 대한 균형적 정책 노선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아베 담화에 언급된 적극적 평화주의는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일본의 군사 안보적 제약 해소를 의미하는 안보 체제의 변화를 의미함. 가치관 외교와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일체화되어 있음. 미국과의 협력을 실용주의나 힘의 논리가 아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자리 잡도록 위상지우는 것이 가치관 외교 패러다임의 역할임
- 21세기구상간담회에서 기타오카, 다나카, 호소야 3인이 세계사적 맥락을 강조하면서 보여주었던 국제질서에 대한 협조를 기준으로 일본의 국가적 행위를 판단한다는 관점은 현재 일본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평화주의

*가치관 외교는  
미일 동맹 강화와  
중국에 대한  
균형적 정책 노선을  
정당화하는 수단*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소위 ‘보편적  
국제질서’는  
‘미국적 가치’일 뿐**

의 논리로 연결됨. 기타오카, 다나카, 호소야 3인 모두 안보법제간담회의 위원이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님

- 아베 담화의 국제주의도 가치관 외교 세계관의 반영물임. 보편적 국제질서는 존재하고, 이에 협력하는 일본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역사 해석임. 가치관 외교 세계관에 입각한 국제주의 담론에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동의하지 못함. 가치관 외교 세계관에서 일본의 미국중심적 국제주의 외교 담론을 구축하려는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나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의 세계관은 역사수정주의자에게 ‘역사친미’일 뿐임
-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아베에게 기대한 것은 일본적 가치의 계승과 가치부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복고주의적 교육·문화 정책추구이고, 더불어 일본 근·현대 역사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적 관점과 싸우며 ‘아름다운 나라’ 일본의 자랑스런 역사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역사정책의 추구였음. 역사수정주의자 입장에서 가치관 외교에 입각한 아베 담화의 국제주의적 성격은 미국 중심의 세계사 서술 속에 일본을 객체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아베 담화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sup>14)</sup>하는 이유는 아베 담화가 일본 국가 정체성 인식 차원에서 그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세계관에 입각해 있기 때문임.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소위 ‘보편적 국제질서’는 ‘미국적 가치’일 뿐임. 또한 그들은 ‘미국적 가치’와 ‘일본적 가치’가 맞물려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 아베 담화의 국제주의적 성격과 그에 대한 일본 내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반발은 아베 정권의 역사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수정주의를 중심에 놓는 고정적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21세기구상간담회와 아베 담화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였던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음. 아베 담화의 명백한 청자는 일본에 대한 승자였던 미국임. 아시아의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 중심에 없다는 점에서 역사수정주의 역사 인식과 아베 담화의 전제가 되는 국제주의 관점은 차이가 없음. 하지만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역사정책과 국제주의에 입각한 역사정책은 미국에게 상이하게 이해됨. 정책적 차원에서 아베 정권의 국제주의적 역사정책은 2013년 아베 정권의 역사정책을 보는 미국의 불신과 불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었음

- 아베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니시베 스스무(西部邁)는 유고에서 아베에게 기회주의를 버리라고 주문한 바 있음.<sup>15)</sup> 니시베는 아베에게 신념에 입각한 역사 정책의 추구를 주문하고 있으며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의 신념에 대해 믿고 있음. 하지만 2015년 이후 역사 정책에서 보여준 아베의 정책 선택에서 신념 요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전략적 고려 속에서 국제주의적 관점의 역사 정책이 일본의 국가 이익과 아베 정권의 정권 이익에 부합하는 한 아베 정권은 국제주의적 관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5. 나가며

-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일본 국내에서 역사수정주의에서 차별화된 국제주의 외교의 일환으로 간주됨.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아베 담화와 더불어 위안부 합의를 아베에 대한 지지 철회의 이유로 제기함. 한국의 정권교체 후 위안부 합의 이행에 굴곡이 생긴 뒤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이를 국제주의 외교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함
- 반면에 일본 보수 그룹 내 실용주의적 중도 그룹에게 국제주의에 입각한 아베 담화와 위안부 합의는 아베 정권 외교노선의 안정적인 신뢰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음. 일본 보수 정치권 내 중도 그룹에게 아베 총리가 본인의 신념을 꺾고 합리적 방향으로 향했는데 한국이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에서 이에 대해 호응하지 않아 난관에 빠진 것으로 이해함. 이러한 맥락에서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입장에 대한 일본 내 광범위한 반감이 해석될 수 있음. 역사수정주의와 험한론 차원이 아니라, 국제주의 외교 노선에 입각한 외교구상 속에서 한국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 일본 내 국제주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중도 현실주의 세력은 역사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점에서 한일 간 역사현안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 하지만 일정한 외교적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에 있어서 열려 있을 가능성이 다분함. 더구나, 국제주의 담론에 입각한 일본 내 보수중도 현실주의 세력은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조치가 야기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일본의 보수중도 현실주의 세력을 일본 내 여론 변화의 동력으로 사용해서 2019년 한일갈등에 대응할 것인지는 한국 정부에 달려 있는 성격

**역사수정주의와  
험한론 차원이 아니라,  
국제주의 외교 노선에  
입각한 외교구상  
속에서 한국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

이 있음.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 내 보수중도 현실주의 세력이 기대고 있는 국제주의의 초점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지키라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협약에 응하라는 요구임. 국내 사법체계의 최고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한국 정부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외교적으로 재론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지만 일본 국제주의 노선이 말하고 있는 국제질서가 고정불변의 가치에 기반하고 있지 않고, 자국이익을 위한 현실주의적 전략사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임에 입각할 때, 국제주의 노선의 일본 보수중도는 한일 양국 사이의 외교적 타협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2019년 7월 이후 한국 정부가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지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 타협에서 한국이 그리고 있는 구체적 상에 대해서 일본 정책그룹 내에 잘 전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경제보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제질서 위반에 입각해 논박해야 함.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의 국제질서 위반의 성격에 대해서 현재 일본 내에서는 국내 제도 변화일 뿐 국제질서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매우 일반적임. 국제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에 맞추다 보니 ‘수출관리 엄격화’가 실제로는 수출입 관련 양국 기업에게 있어서의 거래비용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가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역사 문제와 별개라면, 신뢰와 신의에 입각한 설명책임의 규범에 입각했을 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해서 환기시켜야 함
- 역사현안에 있어서 국제규범 준수를 강하게 천명해온 일본 측에게 일본 정부의 소위 ‘수출관리 엄격화’가 가지는 자기모순적 성격은 국제규범의 상징을 한국 측이 가져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역사현안에 있어서 일본 중도보수의 실용적 외교 타협 지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커지게 하고 있음. 물론 역사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에서 외교적 협상이 실제로 테이블에 있는지, 그리고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는 국내적 합의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가 일본 내 중도보수를 외교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지에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될 것임

## 주석

- 1) <https://www.meti.go.jp/press/2019/07/20190701006/20190701006.html>(검색일: 2019/8/16); <https://www.meti.go.jp/press/2019/08/20190802001/20190802001.html>(검색일: 2019/8/16).
- 2) 藤井彰夫, “報復の連鎖に「勝者」はいない,” 『日本経済新聞』(2019/7/2); 高橋玲央, “輸出規制強化で「韓国半導体」は大打撃なのか,” 『東洋経済オンライン』(2019/7/6).
- 3) 中西寛, “文政権、止まらぬ急進主義 対韓外交、戦略はあるか,” 『毎日新聞』(2019/8/11); 山田孝男, “韓国へ届く言葉を.” 『毎日新聞』(2019/8/12).
- 4) 2-4의 내용은 필자의 논문 “아베 정권 역사 정책의 변용: 아베 담화와 국제주의,” 『아시아리뷰』 9권 1호(2019.8.31)에 기반을 두고 있음.
- 5) 구유진,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 보수의원연맹 연구,”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선인, 2016); 임은정, “아베 유신과 한반도: 제2기 아베 정권의 대전략과 대(對)한반도 정책,”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 엘리트의 대한 정책』(선인, 2016).
- 6) Bert Edström, *The Success of a Successor: Abe Shinzo and Japan's Foreign Policy*.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2007); Mike M., Mochizuki, Samuel Parkinson Porter, “Japan under Abe: toward moderation or nationalism?” *The Washington Quarterly* 36(4), 25-41(2013); 渡辺治, “安倍政権とは何か?” 渡辺治・岡田知弘・後藤道夫・二宮厚美, 『<大国>への執念 安倍政権と日本の危機』(大月書店, 2014).
- 7) 남상구,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9, 460-462(2014).
- 8) 21世紀構想懇談会, 『戦後70年談話の論点』(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5).
- 9) 中西輝政, “戦後70年と日本の進路”(2015), <https://www.kokuminkaikan.jp/chair/detail20150830.html>(검색일: 2019/8/16).
- 10)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2speech.html](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2speech.html)(검색일: 2019/8/17).
- 11)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9enzetsu.html](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429enzetsu.html)(검색일: 2019/8/17).
- 12)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150814.html](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150814.html)(검색일: 2019/8/17).
- 13) Yuichi Hosoya, “The Rise and Fall of Japan's Grand Strategy: The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and the Future Asian Order,” *Asia-Pacific Review* 18(1) (2011); Yuichi Hosoya, “Japan's Two Strategies for East Asia: The Evolution of Japan's Diplomatic Strategy,” *Asia-Pacific Review* 20(2)(2013).
- 14) 아베의 역사 정책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지식인의 대표적 비판으로는 西尾幹二, 『保守の真贋: 保守の立場から安倍政権を批判する』(徳間書店, 2017); 西尾幹二・中西輝政・柏原竜一, 『日本の「世界史的立場」を取り戻す』(祥伝社, 2017); 中西輝政・西岡力, 『なぜニッポンは歴史戦に負け続けるのか』(日本実業出版社, 2016).
- 15) 西部邁, 『保守の遺言: JAP.COM衰滅の状況』(平凡社, 2018).

## 참고문헌

- 구유진. 2016.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 보수의원연맹 연구.”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 선인.
- 남상구. 2014.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9.
- 임은정. 2016. “아베 유신과 한반도: 제2기 아베 정권의 대전략과 대(對)한반도 정책.”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일본 파워 엘리트의 대한 정책』. 선인.
- Edström, Bert. 2007. *The Success of a Successor: Abe Shinzo and Japan's Foreign Policy*. 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 Hosoya, Yuichi. 2011. “The Rise and Fall of Japan's Grand Strategy: The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and the Future Asian Order.” *Asia-Pacific Review* 18(1).
- \_\_\_\_\_. 2013. “Japan's Two Strategies for East Asia: The Evolution of Japan's Diplomatic Strategy.” *Asia-Pacific Review* 20(2).
- Mochizuki, Mike M., Samuel Parkinson Porter. 2013. “Japan under Abe: toward moderation or nationalism?” *The Washington Quarterly* 36(4).
- 高橋玲央. “輸出規制強化で「韓国半導体」は大打撃なのか.” 『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19/7/6).
- 渡辺治. 2014. “安倍政権とは何か?” 渡辺治・岡田知弘・後藤道夫・二宮厚美. 『<大国>への執念 安倍政権と日本の危機』. 大月書店.
- 藤井彰夫. “報復の連鎖に「勝者」はいない.” 『日本経済新聞』(2019/7/2).
- 21世紀構想懇談会. 2015. 『戦後70年談話の論点』. 日本経済新聞出版社.
- 西尾幹二. 2017. 『保守の真贋: 保守の立場から安倍政権を批判する』. 徳間書店.
- 西尾幹二・中西輝政・柏原竜一. 2017. 『日本の「世界史的立場」を取り戻す』. 祥伝社.
- 西部邁. 2018. 『保守の遺言: JAP.COM衰滅の状況』. 平凡社.
- 中西寛. “文政権、止まらぬ急進主義 対韓外交、戦略はあるか.” 『毎日新聞』(2019/8/11); 山田孝男. “韓国へ届く言葉を.” 『毎日新聞』(2019/8/12).
- 中西輝政・西岡力. 2016. 『なぜニッポンは歴史戦に負け続けるのか』. 日本実業出版社.

❖ 저자 약력

■ 이정환

現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역임. 최근 논문으로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의 현실주의적 안보론과 일본적 민주주의론(2019)”,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 2012년 센카쿠 분쟁화의 일본 국내정치과정(2018)”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도종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편집: 한유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조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